

# 원자력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원인과 해소 방안

이 용 수

한림대학교 객원 교수



**영**국의 과학철학자인 C.P 스노우는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 시대에는 두 개의 문명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즉 한 집단은 현대의 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 잡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과학 기술의 발전 및 그 영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집단이 그들이다.

결국 이런 두 집단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이 갈등은 사회적인 낭비를 조장하여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들이며 이는 정책의 딜레마로 이어진다. 딜레마 현상이란 한쪽의 선택이 다른 한쪽에는 불만족으로 이어져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가령 원자력의 경우,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도 만약 이를 선택한 결과 사고라도 나면 사회적인 충격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유전공학을 들 수 있다. 유전공학은 농·축산물의 품종 개량 및 새로운 치료약이나 진단 시약을 만들어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혹시나 잘못돼 키메라 같은 생물이 나타나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큰 딜레마일 수 있다.

이런 딜레마 현상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일수록 심각하다. 첨단이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아무런 정보를 가지지 못한 전인미답의 경지이기 때문에 딜레마 현상은 어떤

분야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두 문명 집단간의 갈등은 과학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원자력에 관한 문제도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며 언젠가는 풀려질 수밖에 없는 순간의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내재된 원자력 자체의 난해성, 정부의 일관성이 없고 소극적인 정책, 주민들의 애항심이 갖든 낭비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좋은 삶든 이미 원자력의 물결 속에 휘말려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활용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간에 원자력을 보는 시각의 차가 커 정책의 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지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 남비 현상의 사회적 이해

#### 1. 남비 현상의 특징

일반 대중들이 싫어하는 시설 중에는 쓰레기 처리장, 거대한 공장과 같은 위험 시설, 특정 질병 관리 시설, 원자력 시설, 교도소 및 정신 장애자를 위한 공동 시설 등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란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런 시설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세워지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학자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남비(NYMBY: Not In My Back Yard)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즉 자신의 뜰 안에는 안된다는 영어적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남비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이들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 뜰에는 안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자신의 신념보다는 주위의 대중 심리에 크게 자극 받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런 시설들은 환경 오염, 교통 혼잡, 건강 위협, 재산적 가치 하락, 공포감 조성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지역 사회로 하여금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을 지니고 있다.

해당 시설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바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를 포함한 부정적인 현상 때문에 반대한다.

셋째, 해당 시설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은 사회 전체에 널리 분산되는 반면,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자신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인식을 갖는다.

이 때 주민들에 의한 부정적인 반응은 공청회나 청원 등 합법적인 방법 외에도 데모나 폭력 행사 등과 같은 감정이 개입된 반응까지 보인다.

넷째, 입지 시설 결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즉 지리학·지질학·경제학·인구통계학·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 있게 고려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반대가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된다.

다섯째,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화학 물질 또는 기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들의 영향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인 논란과 관련이 있다.

주민들은 입지될 시설물이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 안전

한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 이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신념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설 그 자체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사회 문화적인 문제다.

#### 2. 남비 현상을 보는 시각

남비 현상을 보는 견해도 여러 가지이다. 전통적인 견해, 급진적인 견해, 사회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전통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시설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공공 시설들인데도 관련 주민들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공익 실현을 방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역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사회의 이익과 전체 사회 공간의 양립할 수 없는 마찰과 갈등을 가져온다.

둘째, 원치 않은 시설들이 들어서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이다.

정부나 민간 산업체와 같은 시설 입지 사업 추진자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은 시설들이 특정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입지가 제외될 경우 그 해당 시설 입지 지역의 주민들은 대개 비합리적인 반응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시설 입지 제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나 과학적인 조사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주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는 감정에 의존하여 격렬하게 반발하는 비합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시설 입지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주민 반발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하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의 생존 능력도 잠식시킨다.

사업 추진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주민 반발은 사회 전반에 불신 풍조를 만연시켜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른 새로운 시설 입지 사업을 지연·중단·축소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결국 전통적 견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익 우선주의, 국가 발전 지상주의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서는 특정 지역의 주민 반발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을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호적인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계

도를 강조하는 하향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비교적 급진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 제의 시설들은 사회에 편익을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공공 시설들이며 시설 입지를 구하기 힘든 것은 특정 시설 입지 지역 사회와 전체 사회(국가)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입지 지역을 포함한 전체 시민 사회(다수의 지역 사회)와 공익 실현을 주장하는 국가간의 대립과 마찰로 보는 것이다.

시설 입지 문제는 특정 시설 입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공익성이나 국가 이익만을 강조하는 국가의 입지 추진에 맞섬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에 비선호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인간 본연의 속성이며, 이를 결코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당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산업체 등과 같은 시설 입지 사업 추진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입지시키려고 하는 시설들은 대개 매연·소음·악취·위해 물질 등을 발생시키

거나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훼손되며 교통이 혼잡해지고 건강이 위협받고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결코 비합리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런 행동은 정부의 책임 행정을 유도하는 길잡이 구실을 하며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 문화 유산들을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양질의 환경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며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밀거름이 될 수 있다.

지역 오명을 의식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러브커널 지역 주민들이었다. 이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은 러브커널의 아이들이 접촉성 질환을 전염시킬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러브커널 지역의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가구에 묻어 있을 지도 모를 화학 물질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이들로 하여금 러브커널 지역

의 가구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다 [(L. M. Gibbs love canal : My stor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2), p52)].

결국 급진적인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민주성·사회적 형평성 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서는 시설 입지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집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반발을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시설 입지에 대한 그들의 반발을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 주장, 즉 민주주의의 건전한 사회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진적인 견해에서는 시설 입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제와 제도를 강조하는 하향적인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시설 입지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급진적인 견해에서는 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 반발을 입지 제의 시설의 부정적인 외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속성으로 봄으로써 해당 입지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 사회의 이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견해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사회 구조(전체적인 체계)에 있다'고 보는 갈등론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본이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시설 입지 전략을 채택하고, 이러한 자본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정부가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반발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발의 원인을 세 개의 실체(지역 주민, 자본, 국가)들간의 관계, 즉 사회 구조적인 불균형의 역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시설 입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 중심의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발이 해당 시설 입지 지역 사회, 자본, 국가간의 역학 관계에서 비롯한다고 봄으로써 사회 구조들간의 불균형 해소를 강조한다.

이 견해는 사회 구조들간의 균형과 조화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 원자력의 이해

#### 1. 원자력 정보

원자력 정보의 대부분은 과학자들의 논문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정보는 국민들에게 전해진다.

원자력 시설이 혐오 시설로 이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연구 중의

하나 1990년 영국의 사우샘턴대학교의 마틴 가드너 교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 백혈병 환자 연구」였다.

그는 우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어린이들에 백혈병 어린이가 많다는 점과 그들의 아버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했다는 점, 그리고 발전소가 바깥보다 방사선 준위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

그는 결국 '방사선이 많은 원전에서 근무한 남성들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백혈병 환자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는 백혈병이 빈발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리처드 경은 내이처지(誌)에 셀라필드 부근에서 발생한 어린이 백혈병은 원자력발전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나중에 냈다. 그는 가드너 교수가 했던 연구를 반복한 결과 어린이들의 백혈병은 관련된 어린이들의 부모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부모의 방사선 피폭이 자녀의 백혈병에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는 일본의 원폭 피해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연구가 원자력에 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많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반핵 단체들에서 나온다.

그들은 일반 대중과 접촉할 기회는 적으나(19.8%)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84.1%).

이들에 의한 원자력 정보는 대부분 과장된 것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형 가축이나 무뇌아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데도 원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원전이 그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일반 대중에게 그들의 정보는 사실로 먹혀들기 마련이다. 정보는 그들의 구미에 맞게 가공돼 원자력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부각된다.

세 번째 원자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학교이다. 그러나 오늘날 원자력 지식을 학교에서 얻는다는 사람은 한국의 경우 10% 정도에 불과하다(한국원자력문화재단, 1993년 국민 의식 조사).

네 번째 국민들이 가장 쉽게 원자력 정보를 얻는 곳은 매스컴을 통해서이다. 특히 한국인의 80% 이상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많다. 기사는 일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실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가령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초과 암발생자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이기에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지만 '기형 가축이나 무뇌아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뉴스거리다. 그래서 불신의 쌓은 커진다.

## 2. 원자력의 인식

원자력의 본질을 추구하는 핵물리학은 첨단 학문으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그 원리와 응용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전연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지의 세계는 동경과 함께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원자력이 처음으로 인류에게 이용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뇌리에 자리잡게 된 것은 원자폭탄이란 핵무기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원자력은 일반 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결과적으로 '원자력은 이해하기 어렵고 무섭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91년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원자력'이란 말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었다(52.5%).

이러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있어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 매체가 중요한 역할(66.5%)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형성에는 반핵 또는 환경 보호 단체들의 역할도 크다. 특히 이들 반핵이나 환경 단체들로부터 얻게 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비록 그 비율은 낮으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 또는 선전 내용은 부정적인 신념 그룹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위협 인식

아직도 원자력발전소가 원자폭탄처럼 폭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세 이상 한국 국민에서 43.5%가 된다는 것은 원자력 국민 이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 특히 여성들 가운데 52.3%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1992, 환경관리센터).

원자력발전소가 불안한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 예상 외의 사고, 방사선 누출, 고장, 외국 기술에 의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문제는 주변 환경 오염이나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우려 등 주로 방사선의 누출과 오염에 관한 불안이다.

사실 원자력 이용에 따른 위험은 방사선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색깔도 맛도 없는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의 위험은 받는 방사선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위험 인식은 과학 기술에 대한 회의이기도 하다.

위험이란 말은 어떤 사물(thing)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사고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위험은 고도의 인위적인 고안물이다(김영평 1998).

상대적인 위험이 큰 데도 자기 스스로 감수한 위험, 즉 자발적인 위험은 위험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은 적어도 그 위험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에 도전한다. 편익이 위험에 앞서기 때문이다.

위험은 선택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경우를 자동차에서 본다. 자동차는 높은 사고율로 보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문명의 이기이지만 그 이유로 자동차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더욱이 자동차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위험은 확률로 계산된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3천분의 1이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10만분의 1이고 산이나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은 100만분의 1이며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은 200만분의 1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100기가 운전되다가 그중 1기라도 사고가 나 반경 40 km 이내에 사는 1,500만명중

1명이라도 죽을 확률은 50억분의 1이라고 미국 MIT의 노만 C. 라스무센교수는 그 안전성을 계산하고 있다.

**입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

**1. 방사성 폐기물 부지 선정**

우리 나라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가동되고 나서였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입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84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 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3차례의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개최된 제211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3대 원칙을 의결했다.

이 원칙은 첫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육지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추후 해양 처분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을 원전 부지 외부에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셋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한다로 돼 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국가 주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86년 5월 12일 원자력법이 개정되었고, 88년 7월 27일 개최된 제220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영구 처분장을 95년까지 건설하기로 의결했다.

그해 12월 29일 열린 제221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 사업 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사업은 86년부터 87년에 걸쳐 한국전력기술(주)의 용역으로 시작돼 전국에서 89개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2단계로 25개 후보지로 압축됐다. 88년에는 다시 7개로 압축됐다. 그리고 다시 경북 영덕·울진·영일의 3개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들 3개 후보지는 모두 임해 지역으로 동굴을 파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용후 연료는 저장 시설을 갖추어 보관하며, 그 외 이 시

(표) 미국인들의 위험 인식 요인

순 위	유권자 동맹	남자 직장인	대 학 생	사망 통계
1	원 전	권 총	원 전	담배 15만/100만명
2	자 동 차	오토바이	권 총	음주 10만/100만명
3	권 총	자 동 차	담 배	자동차 사고
4	담 배	담 배	자 동 차	권총
5				강도
6				
7		원 전		방사선(20위 이하)

\* 자료 : 송명재, 1993, 방사선, 몇번째로 무서운가

설 관리를 위한 부대 시설들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부지를 조사한 다음 그 중 1개 부지를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89년도 후보지 선정 경위 설명과 앞으로의 주민 설득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겐 전달된 자료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후보지역마다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쟁기 대회, 국도 점거 농성 및 진정서 제출 등 다양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3개 후보지가 모두 경북에 소재한 결과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기관마저 반대에 가담함으로써 정부는 89년 3월 부지 조사를 중단했고 사업 추진도 무산되었다.

이때는 마침 정부의 중간 평가 문체가 한창 거론되던 때라 정부도 갑자기 현장에서 주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던 한국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의 철수를 지시함으로써 부지 선정의 제1막은 끝났다.

정부는 90년 초부터 부지 확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그해 3월에 과학기술처 장관은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무인도에 처분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은 연구 시설과 함께 임해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 입지 예정 지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제226차 원자력위

원회에서는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안면도 인근에 원자력 제2연구소란 이름으로 방사성 폐기물 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그리고 추후 조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원자력 위원회는 의결했다.

이곳이 최종 후보지로 지목된 것은 대덕 연구 단지와 가깝고 자연 환경이 좋으며 교통 및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국도 개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11월 9일 열릴 예정인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의 최종 부지로 확정한다는 행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안면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조직적인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투쟁이 안면도의 이장 28명의 사표, 가두 시위, 학생들의 등교 거부, 읍사무실 점거, 경찰차 방화, 공무원 집단 폭행 등으로 이어지자 정근모 과기처 장관은 안면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계획의 백지화를 발표한 다음 곧 경질되었다. 그리고 91년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안면도에 원자력 제2연구소 입지 철회를 의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이란 과제를 안고 새로 취임한 김진현 과기처 장관은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를 비롯한 4개 대학의 부설 연구소에 공동 연구로 위탁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 및

지역 협력 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6곳을 후보지로 다시 지정,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번 후보 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5백억원의 지역 지원금을 비롯하여 주민이 원하는 조건을 서로 협상을 통해 후보지로 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주민들에 의한 자발 유치란 것이 특징이었다.

후보지로 발표된 곳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전통리·초도리 일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기교리·북익리·대사리 일대, 경북 울진군 산성면 사동리·삼산리 마산 일대,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용두리 일대, 전남 장흥군 영산면 상본리·풍길리 일대,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장곡리 일대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주민들도 하나같이 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투쟁을 벌였고, 설사 유치의 뜻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연 반영될 수 없었다. 여섯 곳의 소요는 계속되어 부지 선정을 둘러싼 소요는 끊임없이 없었다.

정부가 서해의 외딴섬 굴업도(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서포3리, 지금은 인천시로 편입)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결정한 것은 94년 12월 22일이었다. 주민이 12명 살고 있는 곳이어서 처분장 설치 반대의 목소리가 적을 것이란 것이 선정의 가장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듬해 11월 30일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조사 결과 굴업도에 활성 단층이 지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초 이 계획이 발표될 때 과학자들 사이에도 활성 단층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부지 면적의 협소 및 교통 문제 등으로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96년 6월 25일 열린 원자력위원회에서 주관 부지를 과학기술처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통상산업부의 한국전력공사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은 연구 기관보다는 사업 부처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날 의결 사항 가운데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로 계통 설계 기술을 한국전력기술(주)로 넘기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 2. 원전 부지 선정

건설부는 80년 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국토 이용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전원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남 6개소(여천군 화양면 이목리, 신암군 압해면 송공리, 고흥군 도양면 장계리,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해남군 황산면 외립리, 장흥군 대덕읍 신리) 경북 2개소(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및 평해읍 진산리), 강원 1개소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등 9개소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원전 후보지로 지정 고시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우려와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후보지 해제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산업자원부는 98년 12월 29일 9개 후보지 중 8곳을 해제하고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는 기존 부지 확장 등 대안 제시를 조건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울진군은 기존 부지의 확장 등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부지 선정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원전 부지 후보지의 해제 결정은 최근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것도 이런 결정을 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며, 새 정부가 오래 전부터 정책적으로 원전 후보 부지에 대해 해제를 주장해 온 것도 이번 원전 후보 부지를 해제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원전 후보지의 지정은 그동안 거의 20여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 주민과 정부간의 대립과 투쟁은 수많은 사회 갈등과 낭비를 맞으면서 계속되었다.

이제 정부는 기존의 원전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원전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전 부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경남 울주군이 유치를 신청하는가 하면, 경북 청송군 진보면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어 원전 시설의 유치가 지자체의 수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원전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의 요인

### 1. 주민 참여 문제

사회가 고도로 정보화·민주화되어 감에 따라 행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이 한층 늘어나고 있으나 논란도 만만치 않다.

주민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 대중, 즉 주민들이 전문 지식이 없고 의사 결정시에 초래되는 행정상의 복잡성과 비능률 및 그들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책임성 문제 등으로 주민 참여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주민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은 행정상 의사 결정 사항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갈등 해결을 촉진하며 일반의 관심사에 대한 관료들의 관심 표명, 정책 집행의 가능성의 증대, 외부의 관점 반영, 비밀상적인 전문 지식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 문제는 행정의 능률을 강조하느냐,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에서 평가는 다르다.

그러나 오늘날 위험과 관련된 활동



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결정은 윤리적이거나 규범적인 문제로서 정당성을 우선 필요로 한다. 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수용 없이는 시설 입지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 주민 참여는 공청회·특별조사단·자문위원회 및 사업 추진자들과 직접 대화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과 정보의 공개 정도이다.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의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전과정에 걸쳐,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2. 정보의 공개

입지되는 시설이 어떤 종류이고 그 규모나 생산 또는 폐기되는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적인 복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황해운, 1995).

첫째, 잠재적 부지를 미리 발표하는 것은 조용히 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키고 그래서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주장들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선호하는 부지 구매를 방해하여 시설 건립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둘째, 일반 대중들과 환경론자들은 유연성이 없고 무책임하며 이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고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공개적인 기획 과정을 잠식시킬 수 있는 과잉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환경론자들은 공개 기획 토론장을 일반 대중들의 주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유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 조차 하지 않는다.

셋째,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 선정을 위한 복잡한 기획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넷째, 일부 환경 단체들은 오늘날의 전력 수요와 원자력 기술의 미래와 같은 크고 포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지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는 공개 기획 토론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협력 과정은 실패할 것이다.

다섯째, 공개 기획 과정에서 조정

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혼돈이 창출되고 갈등이 격렬해질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3. 보상 문제

주민들이 원치 않은 비선호 시설들은 부정적인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소음·악취·매연·교통 혼잡·공포심 등을 유발하고 건강 손상, 자연 훼손 등의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비용은 해당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은 보다 넓은 지역으로 분산된다.

따라서 이런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보상책이 없거나 보상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사업 강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나친 희생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적절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비선호 시설의 입지 강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촉발시키고 이는 다시 주민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외부성은 전형적인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다. 이는 외부 투자의 감소와 지역 경제의 침체성으로 연결된다.

그 외 지역적인 오명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등 모든 생산물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인 위협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다.

#### 4. 사업 추진자들의 신뢰성 문제

위험의 수용은 위험 관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오늘날 원자력을 다루는 과학자·공무원·산업 관리자에 대한 신뢰는 붕괴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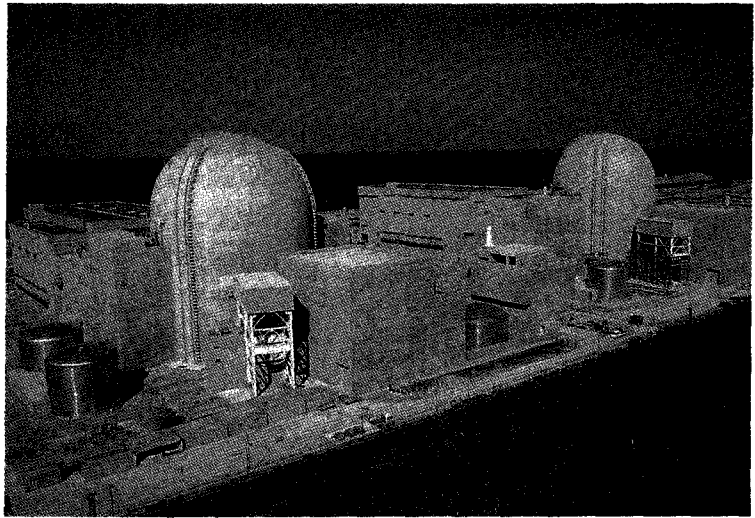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뿐이며 해당 입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추진자들이 비선호 시설들을 자신들의 인근 거주 지역에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해당 비선호 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시설들의 입지로 인한 땅값 하락, 소음 및 악취 발생, 주변 환경의 훼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이 때 그들은 입지 사업 추진자들이 이러한 주변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불신은 창조보다는 파괴를 가져오기 쉽고 한번 파괴된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뚜렷한 회복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반대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게 된다.

불신과 관련된 심리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부정적인(신뢰를 파괴하는)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 에너지 자원이란 것은 거의 없는 한국에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활용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간에 원자력을 보는 시각의 차가 커 정책의 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인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들은 긍정적인 사건들보다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주목을 끈다. 부정적인 사건들은 뜻밖의 사건, 거짓말, 실수, 잘못된 관리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를 취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건은 간혹 눈에 띄고 흔히 훨씬 명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둘째, 사건들이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 때 부정적인 사건들이 긍정적인 사건들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인간은 나쁜(신뢰를 파괴하는) 소식의 원천을 좋은 소식의 원천에 비해 보다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일단 불신이 시작되면 이 불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하나는 불신은 불신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개인적인 접촉이나 경험을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신

제거를 위한 다른 동인이나 조치를 회피함으로써 불신은 가중되고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마음씨가 좋은지, 신뢰할만한지의 여부를 결코 알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조기의 신뢰나 불신은 사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초기의 신념을 강화된다.

가령 TMI 사고에 대해 원자력을 믿는 사람들은 심층 방어 개념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이전에 원자력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책임자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재난을 오직 운으로 돌리는 상반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그 예다.

#### 5. 부정적 외부 효과를 과장 혹은 오도하는 환경 단체와 언론들의 영향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반핵 단체의 구호들은

‘원전 시설이 들어오면 무늬아가 발생하고 기형 가축이 생긴다’였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돼 있어 반출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아주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주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고장에 원자력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현상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써 그런 주장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또 언론의 경우 원자력 시설 운영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수치나 주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상의 정상적인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사실이 아닌 것들이 반핵 단체들이나 기타 관련자들에 의해 주장될 경우 그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의 과제**

**1. 참여 기회 제공**

세계적으로 주민의 참여 방식에는 공청회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영국의 드릭 처분장, 프랑스의 로브 처분장 등 여러 곳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여론의 핵심 인사는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것이 주민의 실질적인 대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2. 정보의 공개**

원자력은 그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보의 공개 노력은 중요하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고 반핵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릇된 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설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와 보상 계획까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산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유익한 산업”이란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3. 적절한 보상**

보상 계획은 시설 지구 구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보상에는 생활권, 즉 어업이나 농업 등 직업상 피해를 고려한 보상과 수용 토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시설 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까지 포함해야 한다. 현지 생산물을 수용하는 것 등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 지구 지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보상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보상은 가시적이고 현재의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불안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해야 한다.

보상의 원칙은 이 시설 때문에 이익을 보는 다수가 손해(물질적 정신적)를 보는 소수를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4. 사업 추진자들의 신뢰 확보**

사업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주장을 따를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 가운데 적어도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잘 사는 마을’이란 상징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런 구상은 새로운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고려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존의 시설 지역을 원전 부지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 지역을 ‘살맛나는 고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5. 보상 대책과 아울러 시행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 마련**

법 제도의 마련은 원천적인 문제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현재 분산된 법을 적용, 국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단일법의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가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공청회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의 마련은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 자결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엄격하고 정당한 법 집행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한 제동이 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정부의 몫이다. 그것은 국가의 권위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른 원자력 분야의 많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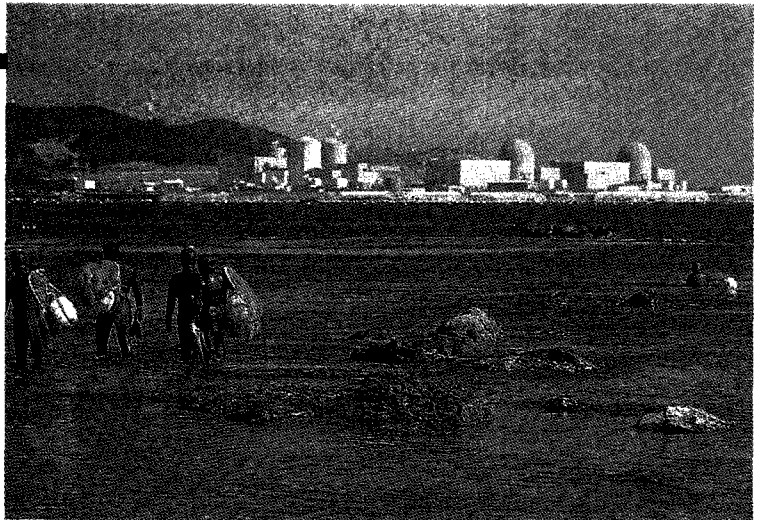
## 6.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한 신뢰의 모색

안전성은 원자력 정책의 핵이다. 안전성은 본질적으로 과학 기술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은 이미 50년의 역사를 가진 확립된 기술이다. 오히려 인간적인 실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감시 감독은 언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결론

인류가 문명 생활을 구가하고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의존하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화석 에너지 자원은 고갈돼 가고 있으며 더욱 지구 온난화는 내



고리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은 그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렇게 때문에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보의 공개 노력은 중요하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하고 반핵 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릇된 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일을 예견할 수 없게 지구인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 이외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은 요원하다. 인류 구원의 꿈인 핵융합로도 앞으로 그리 만만치 않다.

이런 세계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그래서 사용 에너지의 98%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한국이 선택해야 할 에너지 정책은 가능한 국산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 그것 중의 하나가 원자력 에너지다.

그것이 가진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인류는 과거 50년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시험해 왔으며 안전 기술은 확립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반 대중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현대의 과학 기술을 믿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원자력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은 자명하다.

원자력만큼 국제 사회에서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것도 드물다. 물론 그 힘은 핵무기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은 무한하다.

에너지 자원이 없기로는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이나 프랑스가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비교적 초연한 것은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원자력 이용 기술 때문이다. 이제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의 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미 선택된 현실이다. 이 길로 국민의 합의를 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원자력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다면 이익을 보는 다수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은 운전자 및 과학 기술인들의 몫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보상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 원자력의 국민적인 합의는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 남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히려 원전 시설을 보다 견고하게, 효율성 있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 모두의 지혜가 모아질 때이다. ☞